

민주 '윤석열 대장동 의혹' 집중 공격

“윤 부친 부동산 매매는 로또 확률” 국힘 “이재명이 몸통”... 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몸통’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윤 전 총장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씨 누나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파고 들었다. ‘우연’일뿐이라는 윤 전 총장의 해명에 대해선 “로또 확률”이라고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적조정회의에서 “화천대유의 매직”이라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가 윤 전 총장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확률로 따지자면 80만분의 1 정도 된다고 한다. 로또가 3년 연달아 당첨될 확률”이라며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만들어질 정도의 확률”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광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도 거듭 거론하며 대장동 의혹이 결국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카르텔과 기득권 구조가 탐욕적으로 드러나는 막장드라마”라며 “출연하는 등장인물은 주로 국민의힘”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장학금 600만 원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민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답을 해야 한다. 광 의원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볼 거냐”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친 자택 거래에 대해 김 씨가 사실상 편의를 봐준 게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부친 집이 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은 2~3년, 3~4년에 한 번씩 거래가 이뤄지는 동네”며 “그 집을 팔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겠느냐”고 질었다. 그러면서 “4월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7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그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연

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범’이라고 몰아붙였다. 당 회의장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힌 뒷걸개기가 새로 내걸렸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며 “특검을 받으시라, 그것만이 길”이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 막으며 국회회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특검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여념 없다”며 “국민 위임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농·어촌 공공시설물 내진율, 대도시보다 낮아

이형석 국회의원

농·어촌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61.8%로 중앙행정기관 72.7%에 비해 10.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지자체별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9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89.6%), 서울(75.9%), 대구(74.7%), 광주(73.1%), 인천(72.5%), 부산(71.8%) 순으로 나타나는 등 대도시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도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3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43.1%), 경북(49.8%), 충남(52.8%), 충북



노후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공공시설물이 학교 시설물은 내진설계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시기에 건립돼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농어촌 지역 건축물과 학교 시설물의 내진율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4.1%), 경남(55.9%), 전북(56.2%) 등 군(郡) 단위 농어촌 기초 자치단체가 많은 지역의 내진율은 평균을 밑돌았다.

농·어촌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낮은 것은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5년간 197억 부담

윤재갑 국회의원

농협이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



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

여야, 언론중재법 특위 구성 연말까지 재논의

처리 시한 없어 연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

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이규민 의원직 상실

의석수 168명으로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0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전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 공보물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반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그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인사로,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해왔다.

그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항공수요 대비 호남항공청 신설을”

조오섭 국회의원

무안국제공항-광주공항 통합과 흑산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증하는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무안-광주공항은 동남권에 있는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고, 흑산공항 신공항 건설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이어서 관련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3곳의 지방항공청이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인천, 김포, 양양, 원주, 군산, 청주), 부산지방항공청(광주, 무안, 김해, 여수, 울산, 대구, 포항, 사천, 울진비행



장), 제주지방항공청(제주)이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이 전국 15개 공항 중 8개(5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행정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무안-광주공항 통합을 대비해 2019~2023년까지 총 331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 400m를 연장하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이 진행된다. 공사 완료 뒤 국내선 이용객은 2019년 223만명에서 2030년 283만명으로 60만명이 증가하고 국제선도 2019년 68만명에서 82만명으로 1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h3>장성 토지 (매매 분양)</h3>	<h1>꼭! 받아야 할 돈 회수</h1>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p> <p>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p> <p>(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원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전문추심인 직접관리</p> <p>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24시간 상담가능</p> <p>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p>